

# “중소·벤처 역량 강화 지원할 것”

이영 중기부장관, 전주첨단벤처단지 현장 방문... 지역 기업인과 간담회 열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주시에 소재한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방문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주)비이를 비롯한 5개의 첨단벤처단지 입주기업, (유)가시 등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3개사 등 총 8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시제품 제작현장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 등을 둘러보았다.



이영 중기부장관과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일 전북 전주시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열린 전주첨단벤처단지 기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3high(고유가·고급리·고환율) 복합위기를 현장에서 실감한다면서 어려운 금융여건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인공지능(AD)에 대한 신기술의 적극적인 육성도 정부에 주문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금융융위와 80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3high 복합위기 지원에도 2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급리에 대응해 금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할 계획으로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1000개 이상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내 수출의 40% 이상을 기여한 숨은 영웅이 바로 중소기업임을 강조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부는 올해부터 지방중

소벤처기업청 등 각 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하나의 강력한 원팀’으로 중소기업의 고충 해결과 성장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 운송사업 발전 기여 공로 ‘인정’

문승우·강태창·김동구 도의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패 받아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과 강태창 의원(군산신), 김동구 의원(군산2)이 3일(금)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강철승)으로부터 도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한다. 조합측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유가상승 등 각종 난제들로 인해 전복생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전북도의회 3명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에 문승우 의원은 “너나없이 힘든 시기지만 특히 개인택시업계 고충이 장기간 계속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운송사업자들의 어려움은 곧 도민들의 교통편의 및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도 운송사업자들의 근무여건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창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조합 및 승객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구 의원은 “이번 수상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직접 발로 뛰며 민생현장에 최우선으로 힘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 “탈당 후 무소속 당선돼도 민주당으로의 복당 없다”

한병도 민주 전북도당위원장, 전주를 재선거 관련

“탈당한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복당은 없다”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민주당계 무소속 후보군의 복당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당선되면 ‘복당하겠다’는 일부 민주당계 무소속 후보의 선거 운동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주를 선거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사실 당규

만 따지고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무공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민심과 당의 엄격한 기준으로 무공천이라는 중대 결심을 했다”며 “반야(무소속으로) 당선됐다고 민주당이 입당을 받으면 남아있는 후보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탈당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분도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입당을 쉽게 받아도 되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며 “심하게 말하면 (탈당은) 배신 행위”라며 복당 불가를 못 박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본 원칙을 지키는 도당이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주를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는 임정엽·김호서 예비후보다. /뉴시스

##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개소 ‘앞장’

민주 안호영 의원, 완주군 등과 합심 정부 부처 설득 ‘결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임장·장수군)이 무장 서후진해 온 완주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가 2일 오전 9시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는 ‘완주농업경영체 민원센터’ 명칭으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1층에 설치돼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개소식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 이경애 완주군의회 부의장, 심부건 완주군의회를 비롯해 농인단체(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농어업회의소, 새농민회) 등 30여명이 참석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청, 완주군의회와 함께 농민부 등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완주사무소 필요성을 제기했고, 완주사무소 설치를 위해 관련 부처와 면밀히 소통해왔다. 지난 1월 17일에는 완주군의회에서 안호영 농관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간담회’를 개최하여 완주사무소 개설을 촉구하는 완주농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부처에 전달했다. 안호영 의원은 “농정 업무 신고를 하기 위해 전주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완주군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며 “완주사무소가 민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농정수요를 고려하여 운영 기간과 처리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관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개설은 지난 2020년부터 완주군 농업인들이 꾸준히 건의해 온 숙원사업이었지만, 농관원 측은 윤석열 정부 조직 광역화 및 간혹조치 방침에 따라 인력이 감축되어 사무소나 분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한편 국립농관원은 전북도 내 시군별로 사무소(12개소)를 두고 운영 중이지만 완주지역만 유일하게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고 전주 소재 전북지원에서 통합 운영 중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익산 B고교 학생 특수폭행 교사의 교감 승진? 안될말”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육단체들, 사학재단 등 규탄 나서

최근 익산 B고교의 교감 연수 대상자에 오른 교사 A교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육단체들은 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특수폭행 교사의 교감 승진 사태를 만든 익산 B고 사학재단과 이를 승인한 전북교육청을 규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육단체들은 2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특수폭행 교사의 교감 승진 사태를 만든 익산 B고 사학재단과 이를 승인한 전북교육청을 규탄했다.

이 자리는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성명서 등 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가 주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학생 4명을 과잉칼로 때려 그중 1명에게는 다섯 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힌 바 있다며, 이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진행된 ‘익산 B고’ 사건으로 그 진상이 이미 밝혀졌고, 전북교육청은 징계 권고 및 경찰 고발을 했다는 것. 하지만 A교사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냥 ‘주’라는 행정처분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익산 B고 재단은 A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켰다. 2022년 이 재단은 A교사를 교감 승진 대상으로 지정해 전북교육청에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전북교육청은 A교사의 전력을 알았기에 재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재단은 2023년 교감 승진 대상으로 A교사를 다시 지명했고, 이번에는 전북교

육청이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들었다.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 특히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사회 봉납성, 중대비리가 발견됐을 때만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교사는 교감 자격연수 추천 제한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다는 입장이다. A교사가 풀이유지 의무를 위반해 관할청에서 해당 법안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행정처분으로 차렷했다고 했다. 이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자명)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교사에게 교감 자격연수는 허용했으나, 임용권은 전적으로 해당 법인의 임용관리에게 있어 사립학교 교감 임용 시 승진임용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 교감의 임용 및 자격연수 추천의 법적 권한은 해당 법인에 있으나, 자격연수 지명의 권한은 관할 교육감에게 있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 성적조작 및 그에 준하는 비위장제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연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은성 기자

## “현장실습 지원 조례 조속 제정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 정우식)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날 27일 현장실습생을 폭행이나 강제근로, 중금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할 근거가 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지부진 계류돼 오다가 영화 다음 소식이 반향을 일으키자 급물살을 탄 것이

라고 했다. 특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도 준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

주, 전남, 울산, 세종 등 8개 교육청은 현장실습 조례라도 있지만, 전북은 이마저도 없다는 것. 그러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다음 소회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면서, 타 시?도 보다 출발이 늦은 만큼, 현장실습을 충분히 지원하고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더욱 정교하게 담겨야 한다고 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관계자는 “현장실습생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